

#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의 중소기업육성정책 개선방안

- 경기도 화성시 중소기업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

윤의영

협성대학교

## Policy Suggestions to the Urban-rural Form City Governments'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 Firms: Based on the Entrepreneurs' Perceptions in Hwaseong City, Kyonggi-do Province

Eui Young Yoon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 Summary

Since the financial turmoil in 1997,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itiated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 firms to strengthe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t is no doubt that such policies contributed to establish better business environment for them. However, many analytical reports and academic studies in recent years diagnose that the economy conditions for the small and medium-size firms are in crisis because many policy measures are made based on the supply-side approach rather than demand-side consideration. In order for the governments' efforts to be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see what the policy target groups(that is, the small and medium-size entrepreneurs) want.

This study surveyed entrepreneurs in Hwaseung city, Kyonggi-do, which has more than three-thousands of small and medium-size firms. It finds that in spite of locational advantages and a variety of policy supports from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they need more financial supports, more effective mass transportation system for commuting workers, less bureaucratic barriers, and so on.

**Key Words** : Small and Medium-size Firm Support Policy, Urban-rural Form Cities

### I. 들어가는 말

1997년의 IMF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의 경기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그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었다. 정부의 정책적 반응은 신속하고 광범하게 나타났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경제기획원 등 경제 산업 부처들이

벤처기업을 위시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창업금융지원, 기술과 인력지원, 공장부지 제공 등의 시책이 봇물을 이루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앞 다투어 중소기업육성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전국이 벤처중소기업지원 경연장이 된 것처럼 들끓었다.

경제적으로 건전한 많은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체제의 기반을 건전하고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IMF 위기라는 외부변수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outcomes)이다. 어떤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되고 얼마나 많은 창업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얼마나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지원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투입-산출’(input-output) 관점보다는 정책이 시행된 결과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지원책 자체를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인 중소기업인들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직후는 때마침 민선단체장 체제가 막 가동된 때와 맞물려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자치단체’를 표방하면서 야심찬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을 펼쳤는데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한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하여 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을 통하여 경기도와 화성시 당국의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시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지방도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논의

### 1. 선행 연구

장호준·김호연(1998)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국가중심 보다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 강화, 도로·교통·항만 등 산업하부구조의 확충, 벤처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 공업입지개발과 공급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산업단지지원제도 시행의 장애요인 제거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권오혁·신동호(1998)는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소기업, 특히 벤처산업의 육성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그 전략으로써 지방의 벤처기업과 관련 산업들 간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한 활용, 성과위주 사업추진, 그리고 생산네트워크 구축의 타이밍과 장소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지역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의 공급측면 혹은 방법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강병주, 2004. 12; 김윤수·송한복·노근호·이경기·오필환, 2003. 4; 대한상공회의소, 1994; 박삼욱·남기범, 2000. 6; 복득규 외, 2003; 신동호, 2000. 6; 양현봉 외, 1997. 5; 이선주, 2003. 10).

정책 공급측면 뿐 아니라 수요측면을 포괄하는 연구로는 삼성경제연구소(2003)의 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중소기업가와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상의 문제 등과 같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의 해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강화, 글로벌스타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친 중소기업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역시 정부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 2. 화성시의 일반현황

화성시는 수도권에 연접되어 있으며 2004년 현재 인구 296,530명(111,517세대), 총면적이 688km<sup>2</sup>로서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5번째로 넓은 중소도시이다. 농지면적은 총 면적의 39%(271km<sup>2</sup>)

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농촌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이 관통하는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중심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인 동시에 인구 100만의 수원시에 인접해 있다. 그 결과 각종 산업시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지역이기도 하다. 주변으로는 시화지구와 화옹지구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 시행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공업지역, 산간지역 등이 고루 분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중소도시가 바로 화성시이다.<sup>1)</sup>

2005년 9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3,544개로 인천남동구, 안산시 등과 함께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도시 중 하나이다. 그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16개 업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 311개 업체, 그리고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3,217개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계금속이 1,250개 업

체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화학(661개 업체)과 전기전자(507개 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도 목재 제지(321개), 식품(209개), 비금속광물(143개), 섬유피혁(93개) 등이 주요 업종이다.

### 3.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 지원 정책

시군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도의 자금지원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으므로 주로 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기도의 기업지원은 창업 및 자금, 기술정보, 수출, 신용보증, 기업운영, 근로자복지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200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개요를 보면 지원규모액수 8,200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에 따라 3.5%에서 5.8%까지 다양하다. 상환기간 역시 1년에서 최장 15년(시장재개발의 경우) 까지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 원(운전자금의 경우)에서 최대 200억 원(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 등이다<표 2>.

<표 1> 화성시 소재 기업체 규모 현황(2005. 9. 현재)

	합 계	기업체 규모(종업원 수)		
		대기업(300인 이상)	중기업(50인 이상)	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수	3,544	16	311	3,217

<표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2005년 계획)

구 분	지원규모(억원)	대출금리	상환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억원)	
계	8,200				
운전자금	6,000	4.35~5.6%	1~4년	5(특별지원 1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200				
구조조정 자금	벤처창업	300	3.5 %	8년(3년 거치)	15
	시설투자	1,500	3.58%		
	신기술사업화	200	3.58%		
유통시설개선자금	200	3.58%	시장재개발 15년(5년 거치)	15(시장재개발 100)	
APT형 공장 설치지원자금	1,000	3.58%	8년(3년 거치)	200	

자료: <http://www.hscity.net>

0) 2001년 3월에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었고, 2005년 현재 3읍 11면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비제조업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창업 7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유통업 등이 망라 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력이나 수출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외자유치 하는 경우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특별지원대상이 되어 지원한도의 2배까지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자금지원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진다. 추진 절차는 벤처창업자금을 예로 들면, 6개 기술평가센터(경기, 인천, 서울, 강남, 중부, 강동) 중 해당 시군이 소속된 곳에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여신 평가를 받은 후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금이나 유통시설개선자금은 해당 시군에서 자금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2005년도 경기도의 시군별 자금지원 현황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총 1,037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총 지원액은 277,498백만 원이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63개 업체 43,931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3,544개 업체의 5%가 경기도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셈이다. 업체 당 지원규모는 평균 269백만 원으로 이는 전체 경기도 평균 업체당 지원규모(267백만 원)와 비슷하다.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은 2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들이 받았는데,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총 295개 업체 178,667백만 원이 지원 되었다.<sup>2)</sup>

이 분야에서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이 65개 업체로 가장 많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화성시 다음으로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36개 업체, 부천시와 광주시가 27개 업체와 14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만 봐도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의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자금지원 외에도 창업, 경영, 수출, 자금, 투자 등과 관련한 기업에로상담과 인력지원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책을 다변화하고 있다.

### III. 분 석

####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은 2004년 4월 21일부터 1주일간 화성시 관내의 중소기업체 중 무작위로 200곳을 선정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 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62부였고, 필요한 경우 일부 응답자에 대하여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62개 업체의 화성시 관내 사업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인 20개 업체, 5년에서 10년과 10년 이상이 각각 21개 업체(각 34%)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8%가 5년 이상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시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히 IMF 이후의 정책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

<표 3> 응답 업체의 화성시 관내 사업기간

사업기간	1년 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응답자 수	1	7	12	21	21
(%)	(1.6)	(11.3)	(19.4)	(34)	(34)

0)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은 시설투자, 신기술사업화, 벤처창업자금 등 3개 분야를 포함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F 위기 이후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투자유치와 국내외 우수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의욕적으로 펼쳤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과정에서 의도된 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정부와 기업 간에 괴리를 드러내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이 상당부분 전시행정이고 현장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 실상을 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경기도와 화성시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현장의 실상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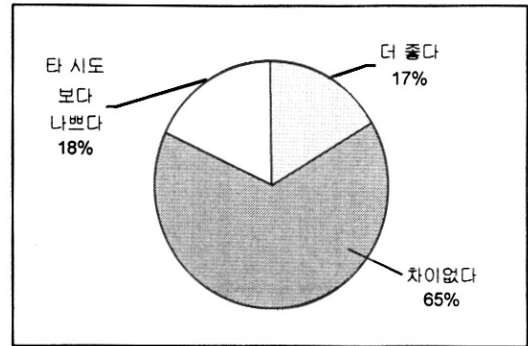
## 2. 설문분석 결과

화성시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은 화성시가 기업 입지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교통접근성과 물류유통, 성장가능성, 자재구입의 용이성, 대기업과의 근접성 등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이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제공하는가? <그림 1>에서 보듯이 ‘타 시도 대비 화성시의 기업하기 여건’을 물어 본 결과 타 시도보다 화성시가 더 좋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다. 화성시나 타 시도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하고 타 시도보다 더 나쁘다는 응답(18%)이 더 좋다는 응답(17%)보다 미세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화성시가 타 시도에 비해 기업하기에 나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공장설립 및 증설규제
- 복잡한 허가, 신고 절차
- 환경단체 및 감시원들의 지나친 간섭
- 공장진입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 인력충원 문제
- 대중교통 (근로자들의 주변 읍면지역으로의

- 출퇴근 문제 때문에 인력충원에 어려움)
- 기타 인건비, 시 당국의 지원부족, 관료주의 등



<그림 1> 타 시도 대비 화성시의 기업하기 여건(총 응답수: 60)

이 항목들 중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예컨대 공장설립 및 증설규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환경단체의 간섭 역시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자치단체의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부분은 도와 시 차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문제들이다.

어쨌든 기업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화성시의 기업경영 여건이 타 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 많은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중소기업체들은 화성시가 타 시도와 기업하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가? 다음의 설문 결과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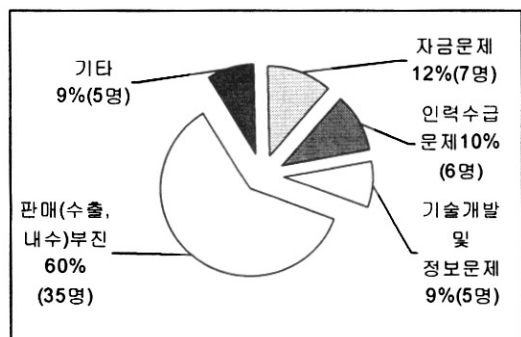
우선, IMF 이후 2004년 설문 당시까지의 기업운영 여건에 대한 인식을 물어 본 결과 ‘대체로’ 또는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39%(24개 업체)와 48%(29개 업체)를 차지한 반면 최근 수년간 기업경기가 비슷하거나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7%에 불과하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표 4> 참조.

<표 4>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기업여건	훨씬 어려워짐	대체로 어려워짐	비슷	약간 나아짐	훨씬 나아짐
응답자 수 (%)	1 (1.6)	7 (11.3)	12 (19.4)	21 (34)	21 (34)

기업불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58명 중 가장 많은 35명(60%)이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판매부진이라고 답하였고, 자금문제(7명, 12%), 인력수급(6명, 10%), 기술개발 및 정보 부족(5명, 9%) 그리고 기타(5명, 9%)로 나타났다(그림 2).

최근 3년 이내에 경기도 또는 화성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자 61개 업체 중 경기도 지원을 받은 업체가 17개(28%), 화성시 지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3%),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가 42개(69%)로 나타났다. 미수혜 업체들이 재정지원을 원했는데 받지 못하였는지는 질문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기업 불황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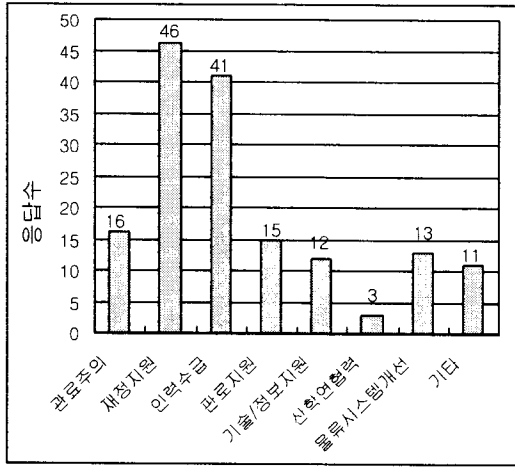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나 수혜여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더 중요한 잣대는 정책집행의 효과성(policy outcomes 또는 effects)이다. 즉, 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 대상집단으로 하여금 의도한 효과가 일어났느냐 하는 점이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의 경우, 도나

기초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이 수혜업체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를 하는 점이다. 앞의 질문에서 경기도나 화성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들에게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물어 본 결과 응답한 16개 업체 중 15개 업체(94%)가 ‘어느 정도’ 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응답수가 적어서 통계적 의미는 감소하지만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의 절대다수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 해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관료주의 (2)재정지원 (3)인력수급 (4)판로지원 (5)기술·정보지원 (6)산학연협력 (7)물류시스템개선 (8)기타의 응답 항목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답해달라고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51개의 복수응답 중 ‘재정지원’이 46, ‘인력수급’이 41 응답수를 나타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관료주의’(16), 판로지원(15) 등을 해결되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지원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앞의 두 질문 항목(재정지원 수혜업체 수 및 재정지원의 실효성)과도 연관이 있다. 이 세 개 항목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재정지원과 인력수급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화성시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수급에 큰 애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전국적으로 많은 업종에서 일반적인 형상이기

총 응답수: 151



〈그림 3〉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해결해야 할 요소

는 하지만 주변 인구나 입지적 특성이 여타 지방도시 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은 지역에서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자칫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업체를 인터뷰 한 결과 의외의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첫 번째 원인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드러났다. 많은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간선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어서 통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앞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이 전체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들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 통근불편이 구인난과 직결된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경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물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입지조건 중의 하나인 교통접근성은 서울 및 주변도시와의 접근성과 주변의 인접한 고속도로가 주는 물류시스템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 지 공장근로자들의 직장접근성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기반시설의 미흡이다. 통근문제를 해소하려면 직주근접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공장 주변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근로자들을 공장주변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도시임에도 아직은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 생활기반시설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최근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지만 공장 밀집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장근로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결국 근로자들은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첫 번째 문제로 연결되면서 직장으로서의 매력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지역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임금이나 비인기 업종의 요소도 작용하지만 일자리까지의 접근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는 업체 입장에서 규모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산업단지와 함께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면 굳이 원거리 통근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금과 같은 구인난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결과는 의외로 나타났다. ‘화성시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전혀’ 또는 ‘별로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업체가 각각 38%(23개 업체), 24%(14개 업체)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입주의사가 약간 있다’(31%, 18개 업체) 또는 ‘매우 있다’(7%, 4개 업체)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산업단에 입주하면 전기나 용수공급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겠지만 급상승한 지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입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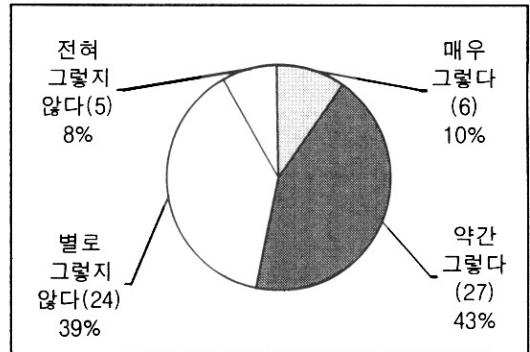
두 번째 설문 영역은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와 화성시의 중소기업지원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화성시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책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응답업체 62개소 중 53%(33개 업체)가 ‘약간’(43%) 또는 ‘매우 그렇다’(10%) 라고 답하여 ‘별로’(39%)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8%) 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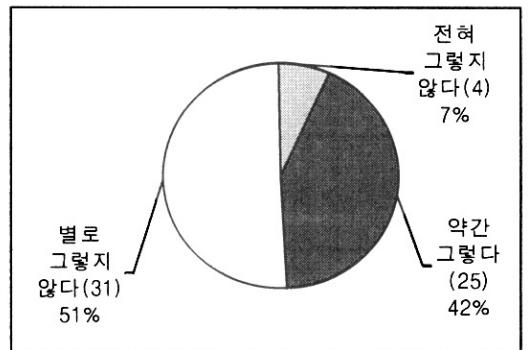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화성시가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각각 7%와 51%로 나타나서 ‘약간 그렇다’(42%)는 긍정적 답을 훨씬 상회하였다<그림 5>. 이는 화성시의 노력 여부 못지않게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은 대부분 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초자치단체는 도 정책의 경유지와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 뚜렷하게 시의 ‘업적’이 드러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기업경영 상의 애로나 민원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화성시 당국의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문항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답(별로 54%; 전혀 그렇지 않다 7%)이 긍정적인 답(약간 그렇다 37%; 매우 그렇다 2%) 보다 높게 나왔다. 화성시의 경우 IMF 이후 중소기업 지원부서(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 또한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에서 경영지원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화성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실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성시의 중소기업지원을 제도적 노력에 대하여 관내의 업체 종사자들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그림 4>와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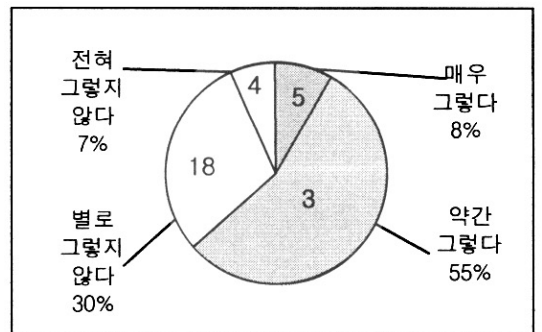
그렇다면 화성시 공무원들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제도는 결국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4년 전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를 위해 화성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물어



<그림 4>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실효성 평가(총응답수: 62)



<그림 5> 기업환경 개선에 화성시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총응답수: 62)



<그림 6>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노력에 대한 인식.

본 결과 ‘그렇다’는 답이 63%(‘매우’ 8%; ‘약간 그렇다’ 55%)로 ‘아니다’라는 답 37%(‘전혀’ 7%; ‘별로 그렇지 않다’ 30%) 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그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해결해야 할 요소'에 관한 질문에서 '관료주의'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수의 11%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V. 요약 및 제언

설문을 통하여 경기도 및 화성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자면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지원의 경우 수혜업체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규모와 지원업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터뷰 결과 일부 재정지원이 특정업체에 특혜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도 있었다. 따라서 재정지원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정지원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화성시에서의 중소기업경영 여건에 관하여 설문을 한 결과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시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의 실효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교통접근성, 성장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여건이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자들의 주요 통근수단인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 당국의 각종 시책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업무 전달의 경우 팩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만능주의에 따르면 행정고객(중소기업)들은 일일이 시 홈페이지의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 의외로 번거롭고 자칫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팩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각종 시책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업무 전달을 팩스를 이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자민원이나 기업애로 창구, 원스탑 서비스 등 제도적 장치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도 허가와 신고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많은 경우 인허가 시에 고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신청 시 대행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기업애로의 청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업체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교통접근성 등 기업하기 좋은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 한 경우를 사례분석 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양식이나 산업비중, 행정체제 등은 도시형으로 변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과 같은 도시 및 기업경영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대표적인 시사점으로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입지 조건이 좋은 수도권의 경우가 이렇다면 여타 지방의 중소도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와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V. 참고 문헌

1. 강병주(2004. 12). "기업지원기관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7).

2. 권오혁·신동호(1998).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접근.”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4(2):185-211.
3. 김윤수·송한복·노근호·이경기·오필환(2003. 4).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38(2).
4. 대한상공회의소(1994). 『중소기업지원체계의 효율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5. 박삼욱·남기범(2000. 6).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지구 개발방향.” 『국토계획』. 35(3).
6. 복득규 외(2003). “한국산업과 지역의 생존 전략-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7. 삼성경제연구소(2003. 9). “중소기업 활로모색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제 146호).
8. 신동호(2000. 6). “첨단벤처기업의 산관학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1).
9. 양현봉 외(1997. 5).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10. 이선주(2003. 10). “중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1. 장호준·김호연(1998).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12. 중소기업청(2000. 5).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2005년 10월 5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